

바닥 민심 움직였다...“내달 중순께 골든 크로스”

이재명 4박5일 광주·전남 일정 마무리 자세 낮추고 쇄신 외치며 민심 잡기 지지층 결집 ‘이재명 바람’ 일으켜 1번 국도 타고 세종·전북 일정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닷새 동안 광주·전남 바닥 민심을 훑는 등 호남에서 ‘이재명 바람’을 일으키며 본격적인 본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4박5일간의 일정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고 광주와 전남을 돌며 농민과 어민, 직장인, 대학생, 5·18 유공자, 청년, 시장 상인 등 각계 각층을 만나며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지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성과 쇄신을 통해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후보는 다음 일정으로 ‘1번 국도’를 타고 세종·전북을 순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영광을 끝으로 4박5일간의 광주·전남 ‘패러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지역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긴 기간을 머무르며 바닥 민심을 잡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순회 기간 이 후보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진보 진영의 아성으로 여겨던 광주와 전남 민심의 이반 움직임과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후보는 닷새 동안 사과와 반성, 쇄신을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특히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라며 반성과 쇄신을 통해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또 범여권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민주 진영의 일원이면 과거를 따지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전통적 지지 세력의 결

집도 꺾었다. 이 후보는 순회 기간 많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사망한 전두환씨의 과오와 부인인 이순자씨의 ‘대리 사과’ 등을 성토했고, 역사왜곡 특별법 추진을 선언했다.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태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면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국회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닷새 간의 광주·전남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이번 주 내에 선대위 개편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총무·전략·정책·조직·직능·홍보 등 필요한 본부 6~7곳만 남겨두는 식으로 조직을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괄본부장은 없애고 선대위원장이 각 본부를 직할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했던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이런 행보를 통해 지지율이 정체됐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의 ‘바닥 민심’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고, 기대보다 낮은 호남 지지층의 반등 계기가 생겼다는 자평이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2월 중순께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토끼를 먼저 단속하는 이 후보의 행보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후보는 이번 주말 순회 일정으로 서울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쪽으로 선회했다. 새 행선지로는 세종과 전북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1번 국도를 타고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이날 “충청의 아들”을 외치며 첫 지역 방문 일정을 시작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엿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다.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 등 강점을 내세우며 중원 쟁탈전에 맞불을 놓고, 호남 지역 민심에도 다시 한번 호소할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지역 일정을 시작하면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강점이 더 돋보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윤석열 35.5% 동률

한국리서치 대선 다자대결 조사 KSOI 조사 윤 41.8%·이 39.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동률을 이루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잇따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6~2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가상 5자대결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 35.5%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 4.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5%,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4% 순이었다.

지치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도 이재명 42.4%, 윤석열 40.0%로 오차 범위 내였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52.4%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1.7%였고,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8%로 과반을 넘겼다. 내년 대선에 대해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4%,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

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21.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후보 41.8%, 이 후보 39.0%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한다’가 42.4%, ‘잘 못한다’는 54.7%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5%, 민주당 32.3%, 열린민주당 7.7%, 국민의당 5.9%, 정의당 3.8%였다.

엠베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2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 38.9%, 이 후보 36.1%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양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43.8%, 이 후보가 40.7%로 기록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무선 90%·유선 10%)의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43.7%, 이 후보 35.1%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넘어선 8.6%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리서치,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문 대통령 “3차까지 맞아야 접종 완료...청소년 접종 속도 내야”

코로나 특별방역점검회의 “오미크론 유입 차단 비상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로 도입도 검토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고 특별대책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며, 3차 까지 맞아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인 접종률이 높은 데 반해 12~17세는 접종이 부진하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편의

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5-12세 아동 접종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와 현장 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더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천500명을 넘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명을 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수가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2022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신기술개발 및 활발한 사업활동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목적 및 내용

- ◆(목적)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통해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및 활발한 사업활동 도모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법률 공표(18.10.16) 및 시행(19.04.17)
-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 되는 구역

공고 및 접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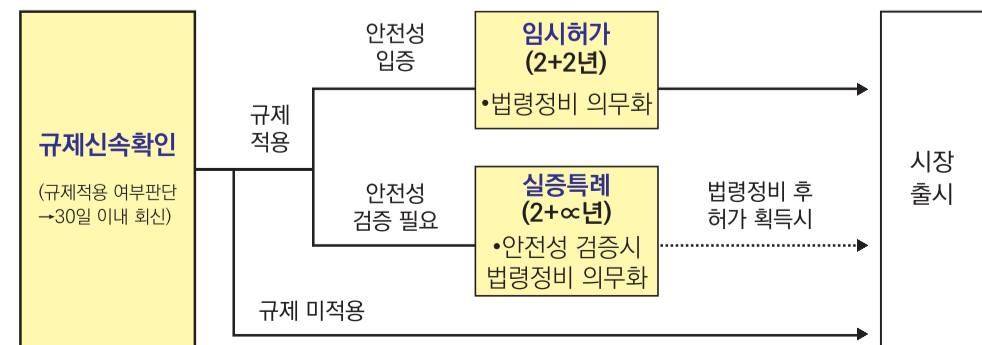
- ◆(조사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연구소, 대학, 진흥기관 등)
- ◆(조사내용) 제안사업, 관련규제 및 제도 개선사항, 현재사업 추진현황 등
- ◆(조사기간) 2021년 11월 16일(화) ~ 12월 17일(금)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

-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
- * 기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 감면 혜택 기회

구분	혜택내용
재정지원	①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 R&D 지원 ②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③ (인프라) 실증 기반 시설·장비구축 등 지원
기타지원	투자세액 조세 감면 및 일부 기업부담금 감면 혜택

규제자유특구 활용 방법



규제자유특구 발굴 규제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 이중 해당되는 규제가 있고, 추후 특구사업자로 지정 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유예 또는 면제
※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 <http://rfz.go.kr/?menuuno=149>
- ②(규제혁신 3중 세트)
 - (규제 신속확인) 규제여부 불명확 시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 화신 받을 수 있음
 -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추후 특구사업자로 지정 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가능
 - (임시허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을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 추후 특구사업자로 지정 시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 및 제출처 확인